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방안 모색

Future Challenges of the Income-led Growth for Korea

주상영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는 그 개념과 정책 수단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소득주도성장은 불평등의 축소,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 총수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서비스의 확대·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유지·확대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요컨대 ‘분배의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인데, 여기서 ‘구조적’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단기 안정화정책의 범주를 넘어서는 제도의 장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겨우 시행 1년이 경과한 지금, 이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앞에 놓인 과제는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보완하며 또 외연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분수경로의 확장, 낙수효과 유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그것이다.

분수경로 혹은 노동경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 확대,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최저임금만 앞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운용해야 한다. 낙수효과의 실종을 기정사실화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낙수효과의 유도를 위해서는 기존에 강조되고 있는 ‘노동 경로’ 뿐만 아니라 ‘금융 경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매입을 억제하고 배당성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의 정규화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이 앞장서 나가야 하지만,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기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4%에서 2%로 낮추면 전체 인건비를 통제하면서도 일자리를 2% 늘릴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더라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면서 시행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정체와 감소에 의한 침체 문제는 이 정도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증세를 통한 공공투자과 복지확대가 경제를 받쳐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왔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수적이다. 민생친화적인 공공투자로 일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생활환경이 갖추어지도록 꾸준히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

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약간의 증세 정도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다만 재정사업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에 그치지기보다는, 가급적 고용과 소득을 직접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과제가 상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한국경제는 지금 기업집단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질서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을 포함하여 각 부문에서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시대추구행위가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은, 그 외연을 확장하여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낙수효과의 복원, 복지 확대, 민생/분배친화적인 공공투자, 장기적 안목의 구조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